

OECD EDRC 회의 결과보고서

I. 출장개요

① 18년 EDRC 회의 개요

○ 개최 일시·장소 : '18.3.12(월)~3.17(토), OECD 본부(프랑스 파리)

* 출장기간 : 3.12(월)~17(토)

-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* 및 한국은행, KDI 등으로 정부 대표단 구성

* 기재부, 법무부, 고용부, 복지부, 중기부, 공정위, 금융위

○ 주요 의제

①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, 거시경제정책, 노동 및 복지

② 대기업 집단개혁

③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

② 회의 총평

○ (OECD) 한국경제가 최근 들어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

- (거시경제) 사회적 지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시행 및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완만하게 축소 권고

- (특별주제) 대기업 집단 개혁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 권고

○ (대표단) 수석대표 발언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언급, 특히,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등과 관련된 정부 입장 표명

II. 출장내용

1.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

① 거시경제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◇ OECD는 한국경제가 그간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으나, 최근 들어 ①건설투자 호조, ②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, ③추경예산 등으로 반등하였다고 평가

○ 다만, 회원국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 리스크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

□ 우리측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도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강조

○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, 수출·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 예상된다고 설명

□ 한편, 대외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나,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 등 감안시 3%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,

○ 통상현안,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

○ 또한, 수출 국가의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정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는 문제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

□ 또한, 정부는 '사람중심 경제'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, '소득주도성장, 혁신성장, 공정경제'라는 3대 전략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표명

② 가계 및 기업부채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OECD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의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으며,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(179%)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
 - 특히,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(8.2%) 또한 GDP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
 - 다만, 가계부채 리스크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
- ◇ 일부 회원국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임을 언급하며, 향후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

□ 우리측은 최근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나, 각종 거시건전성 조치들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, 부채 구조 등 고려시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강조

- ①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 : 투기지역 지정 및 LTV·DTI 규제 비율 강화, 신 DTI 및 DSR 시행 등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완화될 전망
- ② 제2금융권 관리 강화 : 여신심사강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, 향후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
- ③ 부채 구조 : 가계부채의 70%가 소득상위 20% 계층에 분포되어 있으며, 가계의 자산 규모는 부채의 2배 수준

2. 거시경제 정책

① 재정정책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OECD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
 - 주검토국인 호주 등 회원국들은 사회적 지출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

- 우리측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
 - 다만,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OECD의 전망은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를 과대 추계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강조

② 통화정책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OECD는 성장세가 견조하고 물가상승률이 아직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완만하게 축소할 것을 권고
 - 이러한 완화정도 조정은 가계대출 증가 및 내외금리차 확대를 억제하는 등 금융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
 - 회원국들은 대부분 OECD 권고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을 요청

- 우리측은 OECD 정책 권고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
 -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, 앞으로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, 성장과 물가 흐름,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

③ 조세정책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OECD는 법인세 인상이 투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언급하며 한국경제의 **하방위험**이 될 수 있다고 평가
 - 주검토국인 이스라엘 등도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

- 우리측은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**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**여 불분명하다고 설명
 - 한국의 경우 불과 77개 기업만 세율인상 대상이고 나머지 99.7% 기업은 10~20%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을 언급
 - 또한, 77개 기업도 세율인상으로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하는 움직임이 아직 분명하게 나타난 바 없음을 설명
 -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율 이외 규제수준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**균형적으로** 서술되어야 함을 강조

3. 노동 및 복지 부문

① 최저임금 인상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OECD 사무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생산성 저하 등 **부정적 영향**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
 -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**비정규직 증가**뿐만 아니라 **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칠 수 있으며, **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부작용도 검토**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
 - 특히 주 검토국인 이스라엘은 최저임금 인상은 **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**시킬 수 있으나, 자국의 경험에 의하면 **중기적으로 생산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**를 가져왔음을 언급
 - 아울러,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기 전에 **‘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**할 것을 권고

- 우리측은 금년이후 최저임금 인상은 **작년 인상의 효과**를 보아가며 결정될 것이라는 **유보적 입장**을 견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**균형적으로** 서술되어야 함을 강조
 - 한국경제의 여건과 여러 다양한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보다 **균형적인 시각**이 필요함을 강조
 - 이에 보고서 초안 중 **‘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70%까지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아질 것’** 등의 과장된 추측성 문장 삭제 등 수정 요청
- 또한, **포용적 성장의 관점**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**민간소비와 성장에 긍정적 영향**을 미쳐 **고용을 유발하는 효과**를 가져 올 수 있으며,
 -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**일자리 안정자금** 등으로 상당 폭 완충될 것으로 예상됨
 - 아울러, **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** 등을 통해 **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**할 것임을 설명

② 저출산·고령화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OECD는 한국의 **저출산·고령화** 및 **여성경력단절** 문제를 한국경제의 장기적 취약요인으로 언급
 - **고령화**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예산을 장기적으로 추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
 - **저출산** 문제는 경력단절로 인한 낮은 여성노동참여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**종합적인 접근** 필요

- 우리측도 **저출산·고령화** 문제가 한국사회가 직면한 큰 도전임을 인지하고 있음
 -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재정이 적극적인 역할**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,
 - 장시간 근로문화와 가정 내 육아부담의 여성 편중 등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**제도적인 노력**과 함께 고정된 성 역할 관념을 바꾸기 위한 **문화적 측면**에서 개선을 **병행**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

4. 대기업 집단 개혁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사무국은 한국의 대기업집단이 수출 등 한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, 경제력 집중, 불공정 거래관행 등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지적하며 다음 등을 권고함
 -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및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 50% 이상 확대 등 **사외이사의 비중·역할 확대**
 -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폐지 및 집중투표제·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**기업 지배구조 개선**
 -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**대통령 사면권의 제한**
- ◇ **주검토국 호주 대표**는 사무국 보고서를 지지하면서 실효적인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
 - 사외이사 역할 강화, 순환출자 해소, 다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
 - 부당 내부거래, 일감 몰아주기 등 Non-market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
 - 또한,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,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, 소액주주 보호, 집단소송 촉진 등의 대책이 필요
- ◇ 대부분의 회원국은 사무국 및 주검토국의 의견과 유사한 입장
 - **미국**은 호주 대표의 발언에 더하여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을 인용하면서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

- **덴마크, 프랑스** 등은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에 더하여 내부고발자(whistle-blower) 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
- **노르웨이, 이스라엘** 등은 금산분리 원칙이 기업지배 구조 개선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질의

- 우리측은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**평가에 대체로 동의**
 - 대기업집단의 편법 승계, 사익 추구 등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**중소기업의 생산성도 약화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**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
- 사무국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많은 대기업 개혁을 실행했으며,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과 동반성장 달성을 위한 **대기업 개혁 노력**을 지속할 계획임을 설명
 - 대기업의 계열 확장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**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보장**하되, 부를 창출하기 위한 **편법행위를 방지**하는 것이 필요
 - 이를 위하여 소유지배구조의 **투명성과 책임성 제고**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, **소액주주의 권리를 개선**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
 - 구체적인 **한국의 재벌개혁 현황**으로 **다중대표소송*** 입법화 추진 동향 및 **전자투표**를 실시중인 기업사례(현대, 두산)를 소개
- *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근 상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논의중
- 일부 회원국이 언급한 **금산분리 원칙**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**엄격하게 적용**되고 있음을 명시
 - 한국은 상업기업이 **금융기관을 소유**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, 비은행기관은 대부분 증권회사로 여신공급능력이 없음을 지적

5.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

< OECD 사무국, 회원국 의견 >

- ◇ 주 검토국인 **이스라엘**은 한국의 혁신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**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**를 문제점으로 지적
 -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으나,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
 - 직업교육 확대, ICT·서비스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권고
- ◇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**경쟁을 강화**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**동의**하였으며, **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정책설계**가 필요함을 언급
 -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 (호주, 노르웨이 등)
 - 무역장벽 완화,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(네덜란드 등)
- ◇ **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**은 중소기업이 **성장하지 않으려는 부작용**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
- ◇ 한편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금융지원, 중소기업 적합업종, 공공조달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비판
 - 과도한 공공 금융지원으로 좀비기업을 양산하며, 실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창업 초기기업에는 지원이 부족

-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해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여, 중소기업 생산성 및 소비자 후생 저하 등 비효율성 증대
 - 특히 '11년 지정된 두부 생산업의 경우 대기업 확장제한으로 수입콩 사용이 증대, 두부 시장 전체의 침체를 초래
-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, GDP의 1/3에 달하며, 대기업을 배제하고 경쟁을 제한
 - 공공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낮고 생존 가능성은 높아지는 등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저해

- 우리측은 회원국의 의견에 **대체로 동의**하면서도 하도급관계 등 **한국의 특수한 상황**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
 - 대기업-중소기업간 이중구조는 매출액의 77.5%를 차지하는 '**하도급 관계**'에서 비롯됨을 언급
 - 대기업-중소기업간 **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**는 완화 대상에서 **제외**되어야 함을 설명
- 보고서에 기술된 일부 편향된 서술에 대해서는 본회의 이후 사무국 실무협의에서 **균형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교정**
 - 금융지원을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증가 등 **재무적 성과 창출에 기여**한다는 연구결과 제시
 - 두부 생산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관련 **중소기업 매출이 증가**하였으며, 해당 **시장도 지속 증가추세**임을 설명
 - 적합업종이 대-중소기업간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지정됨을 적시
 - 중소기업 공공조달의 GDP 비중 등 **정확한 Fact**를 반영하고,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 유도 정책 설명